

8·31대책 주역들 퇴진…부동산정책 바뀌나

공급 늘리되 '세금 폭탄'은 유지

남은 1년 새 정책 어려워 투기 억제책 계속

靑 "부동산 정책 대통령이 계속 쟁길 것"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 주역 대부분이 부동산정책 라인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들의 퇴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에 눌려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했던 공급확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세율 정책, 즉 '세금 폭탄'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부동산정책의 주도권도 재정경제부로 넘어오는 변화가 생겨 앞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에 변화가 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8·31대책 주역 퇴진= 지난해 8·31 대책을 주도했던 핵심 주역으로는 당시 청와대에서는 김병준 정책실장과 정문수 경제보좌관, 재정경제부에서는 한덕수 부총리와 김석동 차관보, 건교부의 추병직 장관과 강팔문 주거복지부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청와대에서 "한법 같이 바꾸기 힘든 정책을 내놓겠다"며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김 실장은 지난 5월 말 정책실장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정책 라인에서 빠졌고,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이번에 물러나게 됐다.

또한 재경부에서 한 부총리는 7월 말 교체됐고, 김 차관보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건교부에서는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 광풍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 장관이 자리를 내놓았다.

◇ 부동산정책 주도권 재경부로= 8·31대책의 주역들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없다"면서 "재경부는 실무팀이며,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나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계속 쟁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큰 틀 변화 없을 듯= 8·31대책 핵심 주역들이 물러나고 재경부가 부동산정책을 주도할 예정이지만 부동산정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공급을 증시하는 재경부 박 차관이 특별대책반

장을 맡은 것을 두고 향후 부동산정책이 공급확대 쪽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는데 공급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급 확대는 8·31 대책에서도 핵심 내용이었다면서 정책 방향이 변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투기억제 조치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과 등 지금까지 시행해 온 투기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흔들리없이 원칙대로 유지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14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병완 비서실장, 변양균 정책실장, 송민순 안보실장, 김세옥 경호실장, 박남춘 인사수석, 전해철 민정수석(왼쪽부터) 등 청와대 참모들이 노대통령이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전효숙 인준안' 처리 불투명



전효숙 현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 하루를 앞둔 14일 저녁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기습 단상점거 동의안 상정 원천봉쇄

민주당도 지역 여론 외면 반대 당론 정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전효숙 현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습적인 단상점거에 이은 절차 능성으로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전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당분으로 정해 전 후보자의 인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지역 여론과 지역인재 등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따르고 있다.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의 직후 단상을 점거하며 15일로 예정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고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의원들을 보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의장 직원 상장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했던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맞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데 이어 밤샘 대치는 물론, 15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현재소장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비교섭 3당의 중재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온 만큼 비교섭 3당과 무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행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효숙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대책회의 날인을 통해 "이미 전효숙 문제에 대해서 당은 모든 대책을 다 수립했다"며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지 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력저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 후보자의 인준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당분으로 정해 과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전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으로 선호한 명분은 전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아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계개편을 앞두고 여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당리당략적 층면이 고려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본사가 실시한 인터넷 채널 여론조사에서 3분의 2가 넘는 70%의 응답자가 전 후보자 임명 동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민(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효숙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여론은 전 후보자가 순천 출신이라는 점과 절차적 문제를 해소된 점을 들어 국회 인준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고민이 많았다"라며 "그러나 전 후보자에 대한 국민 상당수가 임명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다세대주택 동간 거리 완화·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인하

부동산 안정대책 오늘 발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15일 발표된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 공급 확대·분양가 인하= 정부는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 유동 부담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수도권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의 분양가를 20~30% 인하키로 했다. 공급물량은 분당(ha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김포를 5만3천 가구에서 최대 7만4천 가구로, 과주 3단계 지역을 2만8천에서 4만1천 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200% 까지 상향조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축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관련 대책은 은행권에 대한 규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시가 대비 담보인정비율)은 투기 지역 40%, 비(非)투기 지역 60%이지만 저축은행의 LTV는 투기 지역 60%, 비투기 지역 70%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저축은행과 신협, 할부금융사 등의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2금융권의 LTV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만큼 은행권과의 격차를 좁히는 수준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秋건교 후임 누가

이춘희·김용덕씨 등 거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전격 사의명을 계기로 후임에 누가 올지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장관 후보로 거론될 만한 인물은 지난 7월 개각 때 이름이 둘렀던 이춘희(51)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용덕(56) 건교부 차관, 성경룡(52)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행수(61)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명재(59) 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김영주(56) 국무조정 실장 등이다.

이 청장은 행시 21회로 건교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도시국장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임해온 데다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행정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내부 승진케이스로 입각이 유력시된다.

/연합뉴스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1. 고·중·흉터외과	2. 손·발·지느러미외과	3. 원내외과	4. 표준외과	5. 미세수술·민족의학
6. 외상·交通事故	7. 중증·중상상처	8. 치아·인대·연골	9. 활동·운동기능	10. 재활·면역·영양
11. 관절·척추·신경	12. 관상동맥·기관지·폐·호흡기	13. 신장·나ier·인슐린·당뇨	14. 전신·내분비·여성·남성	15. 소화·장·췌장·간·췌장